

## 유해화학물질 배출량보고제 대상 확대

내년초부터 조선, 자동차 등 21개 업종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보고제(TRI) 대상업종에 새로 포함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체가 화학물질 사용량과 배출량을 조사해 당국에 보고하는 TRI 대상업종을 현재의 석유정제업과 철강업 등 2개업종에서 조선, 자동차 등 23개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2월 23일 밝혔다.

환경부가 TRI 대상업종에 포함시킨 업종은 조선과 자동차 외에 음·식료품, 담배, 신발, 섬유, 모피, 필프 종이,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전자기계, 가구, 가죽, 신발 제조업 등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대상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종업원 100명 이하의 중소업체인 점을 감안해 우선 100명 이상의 업체만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들 업종이 추가됨으로써 TRI 대상업체수는 현재의 270개에서 1천8백여개로 늘어나며 대상업체들은 벤젠, 폐놀, 염화비닐, 스틸렌, 톨루엔 등 80종의 유해화학 물질의 제조, 사용,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기업들이 유해화학물질 다량 배출사실을 공개할 경우 소비자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을 우려해 스스로 화학물질 사용이나 배출을 줄이고 있는 점에 착안해 TRI 대상업종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석유정제업과 철강업 2개 업종의 유해화학 물질 배출량이 전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TRI 대상업체가 보고의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오염총량관리제 – 물이용부담금제 등

오염상태가 심각한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물이용부담금제도가 도입되고 갈수조정댐이 건설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30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부장관 등 13개 부처장관과 6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2002년부터 낙동강수계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허용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개발사업 등에 각종 규제를 받게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부산 등 광역시에는 2002년부터, 일반시는 2003년부터, 전지역은 2004년부터 각각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그동안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낙동강 유역간 지역갈등까지 초래해온 대구 위천공단 조성사업 허용문제는 총리실 산하 '낙동강수질 개선과 위천공단대책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해 이번 확정안에서는 제외시켰다.

또 낙동강의 경우 갈수기에는 한강 등 다른 4대강보다 유량이 크게 적어 오·폐수만 흐르는 점을 감안, 유량을 지금의 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경남·북지역에 갈수조정댐을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5~6개의 갈수조정댐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댐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반발 등을 고려, 내년 1월중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전문가들까지 포함시킨 합동조사단을 구성, 부지선정 등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낙동강 수질오염 개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댐건설지역주민들을 제외한 부산, 대구, 경남·북 등 낙동강유역 주민들에게 t당 100원 가량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초 발족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 266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298개소를 건설해 현재 50%선인 하수처리율을 84.4%선으로 끌어올리고 ▲ 주요 취수원지역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일정기간(2~3년)내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며 ▲ 강변여과수 개발 등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8년까지 수질오염방지사업비 4조 2천472억원, 갈수조정댐 건설사업비 2조 1천600억원, 광역상수도개발사업비 1조800억원 등 모두 8조4천573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하고 이를 국고 6조5천74억원, 지방비 1조5천194억원, 민자 3천805억원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은 “지난 10월말 대책안 시안이 발표된 직후 3차례의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큰 진통을 겪었으나 이후 지역환경,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정부 최종안이 마련됐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2008년까지 현재 3급수인 낙동강 수질이 2급수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염총량관리제 대상 항목 추가

오염상태가 심각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환경부가 마련한 ‘오염총량관리제’ 관리대상 항목에 화학적 산소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오염총량관리제는 2002년부터 낙동강 수계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허용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체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사업 등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30일 발표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생물화학적산소구량(BOD)만 명시된 오염총량관리제 관리대상항목으로는 오염물질의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역환경단체들의 지적에 따라 대상항목에 COD, TN, TP 등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지난 1월 7일 밝혔다.

COD는 주로 공장폐수에서, TN과 TP는 농경지 배수, 축산폐수, 분뇨 같은 비점오염원에서 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그러나 COD, TN, TP의 경우 발생오염원별로 오염배출량이 표준화되지 않은데다 기초적인 조사자료마저 없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민관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조사 연구팀’을 빼면 이달중에 발족하기로 했다.

조사 연구팀은 지역사정에 밝은 시·도전문가들과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소속 연구원 등 20~30명으로 구성되며 환경부는 이들의 의견을 토대로 내년중에 TN, TP 등 오염물질의 관리대상 항목 적용시기 등에 대한 정부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낙동강물종합대책에서 관리제 대상항목을 BOD로 우선 정한 뒤 COD, TN, TP 등은 구체적인 규제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지역환경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 생태계 보전 위해 생태자연도 작성

개발예정지역의 생태가치를 등급화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무분별한 개발을 규제할 수 있는 ‘생태자연도’가 작성된다.

환경부는 전국을 1등급지역(절대보전지역), 2등급지역(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3등급지역(경우에 따라 개발과 이용이 가능한 지역), 별도관리지역(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 등으로 4등급으로 나눠 2003년까지 작성은 마칠 계획이다.

환경부는 우선 경기도 강화도지역을 대상으로 동·식물의 분포도, 식생도, 토양 상태 등을 표시한 생태자연도를 연내에 작성해 무분별한 개발계획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제동을 걸기로 했다.

생태자연도는 원격탐사자료나 항공사진 등의 자료를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화해 개발인·허가기관이나 단체가 현지에 가보지 않고서도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생태자연도를 국토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각종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해 관려부처 간의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자료로 활용할 계  
획이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특정지역의 개발을 둘러싸고 관계부처간에도 환경영향평가 기준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견을 보였으나 생태자연도 작성작업이 끝나는 2003년 이후부터는 그런 불협화음이 없어질 것”이라면서 “생태계의 더 정확한 분포상황을 기입하기 위해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서고 드립니다! 그날까지 그날의 습관**

해양경찰청은 지난 1월 12일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처하는 방제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방제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 11월 해경청이 가입한 '유류오염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OPRC 협약)의 국내 발효시기(2000.2.9)에 맞춰 수립된 것으로 과거 해경청 중심의 방제체계를 정부의 각 부처가 총동원되는 범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계획은 ▲ 국가방제조직 및 지휘체계 ▲ 국제협력체제 ▲ 방제방법 선택 및 실행 ▲ 어장과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구 등 방제조치에서부터 사고현장의 사후 관리까지 해양오염사고 처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체계화하고 있다. 특히 이 계획은 각 관련 부처의 임무와 단계별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대형 기름오염사고 발생시 국가의 모든 방제역량을 동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지역에 특정생태계를 모아 보존하는 자연생태관찰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지난 1월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여가생활과 관광자원으로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내에 반딧불이 학습장 등 14개의 생태관찰시설 설치사업에 모두 73 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태관찰시설은 자연학습공원, 자연생태공원, 나비생태공원, 자생식물원 등 지역이나 생태계에 따라 다양하게 꾸며진다.

특히 남해에는 나비생태공원이, 무주에는 반딧불이 자연학교가 각각 들어선다.

또 전남 함평에는 곤충만을 모아 관찰할 수 있는 곤충생태관이 세워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남 목포에는 인근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모은 자생식물원이, 강원도 양구에도 산악 및 해양지대에서 채취한 것들을 모은 생태식물원이 각각 설치될 계획이다.

환경부 자연생태과 관계자는 “이 밖에도 강원도 속초의 청초호, 경북 문경새재, 부산 을숙도, 울산 태화강, 제주 서귀포, 천지연 등 보전할만한 가치가 높은 지역에도 비슷한 시설물들이 들어서 학습장소로서 뿐만 아니라 주요한 자연관광 명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003년까지 전국적으로 동·식물, 곤충 등 생태계 현황을 편리하게 파악, 무분별한 개발붐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억제할 수 있는 지도인 '자연생태계'를 작성해 국토개발계획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

전국에 14개 지점설립 | 웹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시설물이 전국적으로 설치된다.

환경부는 무주, 남해, 경기도 의왕, 대구 등 전국 14개